

# 어린이 먹거리 안전 관리

김춘년 사무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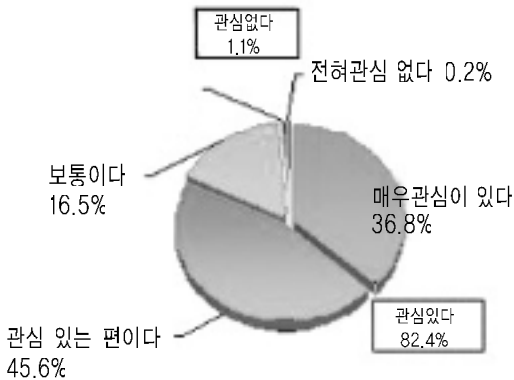
## 1. 어린이 먹거리 안전의 여건과 전망

경제수준의 향상,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우리의 식생활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영양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소아비만, 당뇨 등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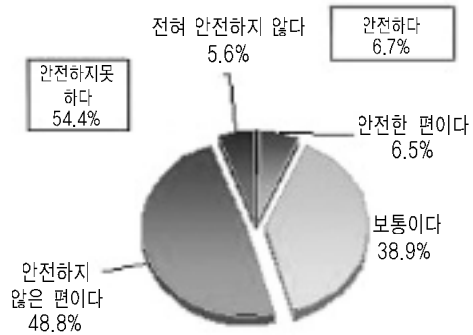
또한, 부모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주변 먹거리 관리가 취약하다는 우려와 함께, 2003년부터 학교 등의 단체 급식 전면 시행으로 단체 급식은 양적으로 급성장한 반면 위생과 질적 수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아토피 피부염,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학교 앞 식품의 안전성·위생성 문제 등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면서 불신감이 확대되어,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은 반면, 국민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도>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체감도>



【그림 1】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조사결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가 높은 편이라는 현실에 대응하여, 대통령께서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하였다. 이후 몇몇 부처에서는 어린이 건강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확산되어 왔다.

식약청은 그 동안 어린이 기호식품 특별관리 실시, 학교주변 불량식품 특별단속 등에 힘써왔으며, 교육부, 복지부 등에서도 단체급식 및 교육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 간의 어린이 먹거리 안전대책은 각 부처·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체계적 시책 개발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규제 중심의 소극적 안전 정책이 아닌 어린이라는 수혜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식품자체의 안전 확보 뿐만 아니라 식생활 안전까지 포괄할 계획이다. 즉 위해한 먹거리 환경을 사전에 차단,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식품선택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 2. 어린이 먹거리 안전의 추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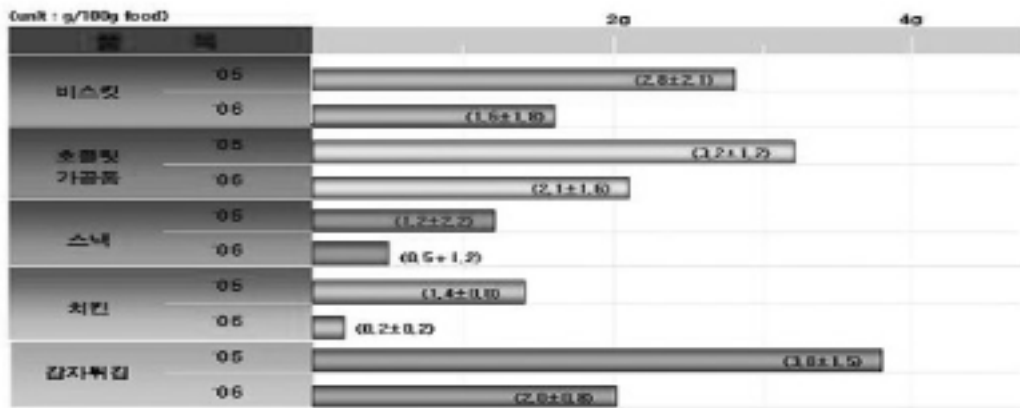
식약청은 2006년 5월 식품안전의 날에 올해를 <어린이 먹거리 안전의 해>로 삼아 「안전한 식품, 바른 영양」이라는 목표 하에 어린이 먹거리의 안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어린이 먹거리 건강 안전 위원회 및 실무추진 T/F를 결성하여, 각계각층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 먹거리 건강·안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6년 5월 어린이 건강을 위한 “바른 영양, 안전한 식품”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어린이 먹거리

건강·안전 위원회 및 실무 추진 T/F는 총 20여 차례의 회의 및 작업을 통하여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통하여 공개 의견을 수렴한 후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 대책’을 2007년 2월 발표하였다.

또한 2006년도부터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사업」으로 트랜스지방·당·나트륨 섭취 저감화, 교육·홍보 자료 개발, 어린이 먹거리 영양기준 설정, 학교 주변 식품 미생물 등 어린이 식품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트랜스 지방에 관련해서는 2004년부터 꾸준한 연구를 통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내 트랜스 지방이 대폭 저감화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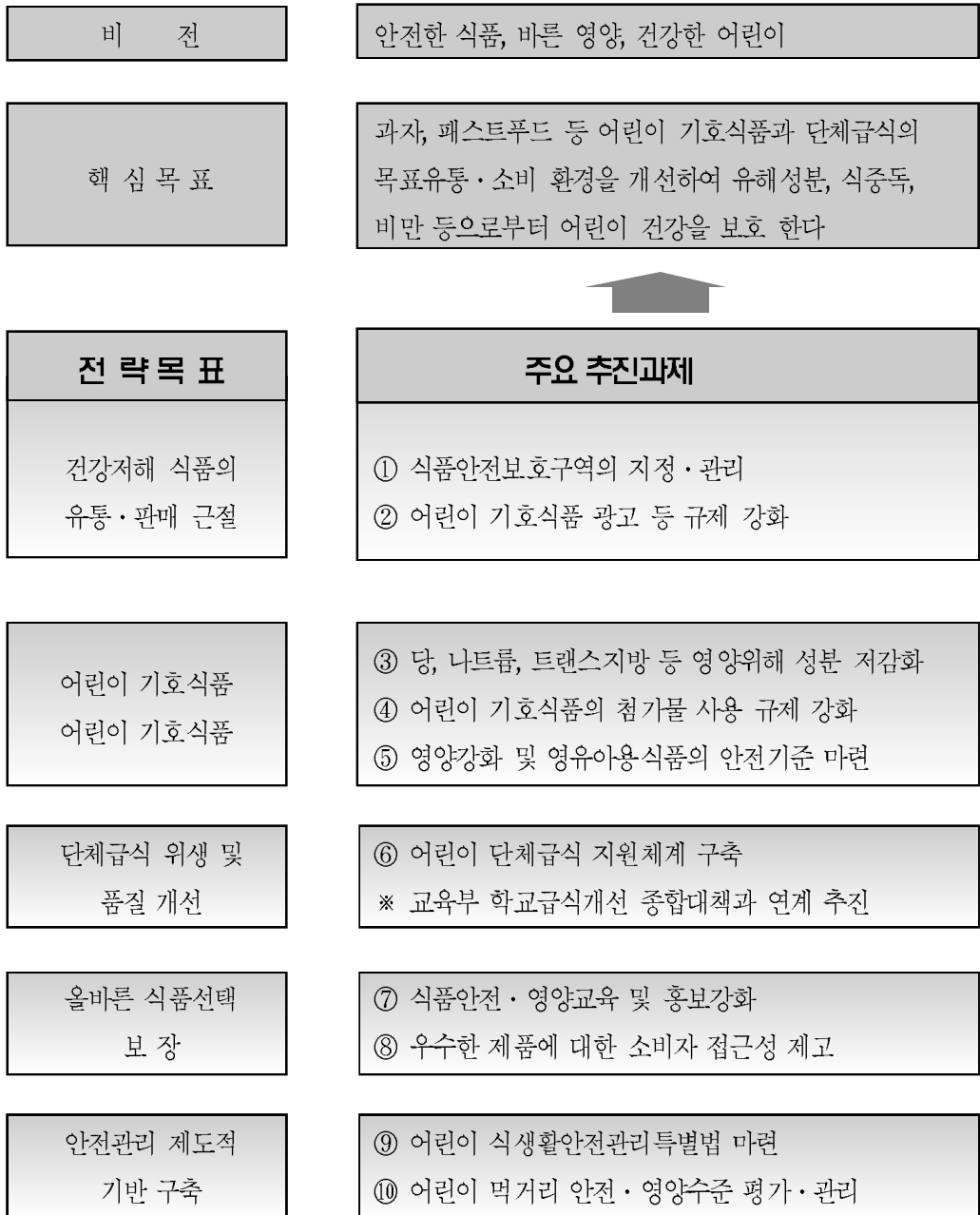


【그림 2】 어린이 기호식품 내 트랜스지방 함량 변화

2007년에는 이를 좀 더 구체화 하여, 어린이 단체급식, 안전평가제도 기반 연구, 무트랜스 유지 제조, 메뉴 개발 및 DB구축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및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3.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 대책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 대책은 ‘안전한 식품, 바른 영양, 건강한 어린이’라는 비전하에 ‘과자, 패스트푸드 등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유통·소비 환경을 개선하여 유해성분, 식중독, 미반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 한다’는 핵심 목표아래, 총 5개의 목표전략을 가지고 총 10가지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표 1】 어린이 먹거리 안전종합 대책

먼저 2007년에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고열량, 고지방 식품 등 건강저해 식품에 대한 규제기준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첨가물 사용 제한 등 안전기준 강화하고, 초등학생 식품안전·영양교육 확대하며, 패스트푸드 영양표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법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 백원우 의원이 2007년 3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으로 발의하고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2007년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안전 및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학교주변(200m 이내)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제조·수입·판매금지, 장난감 등의 미끼 상품이 들어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금지, 영양성분의 의무화, 식품신호등제 도입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2010년까지 건강저해 식품의 광고·유통·판매 규제로 과잉소비 근절하고, 트랜스지방을 1%로 낮추는 등 영양위해 성분 저감화 실현하며, 단체급식 위생 및 영양수준 개선으로 학부모 불안감 해소하고, 좋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어린이 건강은 우리나라의 미래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식품 안전성을 확보부터 영양 있는 식품을 어린이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게 유도하기까지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의 안전·위생·영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체의 자율적 노력과 동참이 필요하며,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 식생활 환경 정착을 위하여 정부, 학계, 소비자 단체, 국민들이 다같이 힘을 합쳐야만 하겠다.